

유보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은설 선임연구위원

유보통합의 목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과 국공립 기관 등 어떤 곳에서 영유아가 교육 혹은 보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용에서, 비용에서, 환경에서 차별되거나 차이하지 않는, 또한 균질적이면서 양질의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대통령은 10대 공약에 돌봄·교육 정책을 포함하였고,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제시하였다. 본 글에서는 적극적인 유보통합 추진이 기대되는 새 정부의 출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올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대통령 10대 공약에 포함하고 있고 돌봄·교육의 내용으로서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제시하였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실행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첫째는 실현 가능한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 개혁안 마련’이다. 이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이용시간 및 이용 일수 확대, 재정지원체계 마련 전까지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지 등 네 가지를 공약하였다. 두 번째 실행 과제

로는 놀이 중심 영어 및 다언어 방과후·특성화 교육 강화이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강사 지원을 확대해 사교육비 절감을 유도하고 다문화 문화 다양성 교육과 연계하여 공교육 내 언어 경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셋째는 과도한 유아 사교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기 사교육 실태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영유아 사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¹⁾ 위와 같은 세부 안들의 키워드를 요약해 보자면, 질 제고 및 비용·서비스 지원 확대, 공교육 내 외국어 교육 확대, 영유아 사교육 억제라는 방향성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하되 그 방향성은 교육과 보육 질 향상, 비용 부담 완화, 돌봄 확대라는 기존의 추진 과제와

1) 더불어민주당(2025).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결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보통합은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할이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본격 추진된 정책이므로 이전 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유보통합은 2000년대 이전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온, 역사가 오랜 정책 이슈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내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통합을 현실에 적용한 실천적 시도가 있었고 통합 추진 방안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그 이후 10여 년 간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있었다하더라도 합일에 이르지 못하고 정책 방향성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직전 정부에서 관할 행정부처의 일원화 통합을 통해 크게 한 발자국을 내디딘 성과가 있었고 이를 초석 삼아 이제 새 정부에서 유보 각 요소마다에 적합한 방식으로 통합의 행보를 쌓아가기만 한다면 완성된 모습의 유보통합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즉,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유보통합을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그대로 반영하여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의’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더 큰 실천력이 실린 것으로 느껴진다. 적극적인 유보통합 추진이 기대되는 새 정부의 출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정책 현황 및 진단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과 공립 기관 등 어떤 곳에서 영유아가 교육 혹은 보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용에서, 비용에

서, 환경에서 차별되거나 차이나지 않는, 또한 균질적이면서 양질의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유보통합은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이 이러한 경험을 가짐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2023년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을 발표하면서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 혹은 돌봄에 따라 기관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명시하였다²⁾. 결국 유보통합의 목표는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통합 기관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가. 유보통합 추진 계획 수립

1) 2단계 방식으로 추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에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를 보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을 목표로 두고, 2단계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의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행정조직인 추진단, 그리고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보 기관 간 격차해소와 행·재정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2) 교육부 보도자료(2023. 1. 29).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준비된 통합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유보통합의 과제들을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23년부터 '24년까지는 시설, 인력, 조직, 법령 등 각 관련 분야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25년부터는 실행에 도입하는 단계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하였다.

2023년은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처음 발표하고 목표, 방향성과 추진을 위한 2단계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25년 7월의 시점에서 볼 때 유보통합 2단계 방식 추진 계획은 아직은 절반의 성취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시행된 1단계의 목표들은 필요한 조직 구성과 기반 마련이므로, 여러 협의체, 심의기구 운영과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목표 도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4년 방안 마련, '25년 실행으로 계획된 2단계의 과제들은 아직 실행 단계에까지 접어들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세부 과제들(교사 대 아동 비율, 돌봄 확대, 비용지원 확대 등)은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2) 유보통합 실행 과제

교육부는 2024년 6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3개 분야에서 13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3개 분야는 상향평준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그리고 관리체계 개선이었다. 우선 상향평준화에는 5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³⁾. 그것은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로, 각각은 세부적인 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돌봄시간 보장, 교육·보육 질 향상, 학부모 부담 경감, 교사 전문성 향상, 이음교육과 영유아 심리정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5개 상향평준화 과제는 2024년 3/4분기부터 시작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이 시도되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계획 또한 5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바,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계 개편, 교사 처우 개선,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설립 및 운영기준 마련이 그것이다. 우선 유·보 입학 및 입소 신청을 일원화하여 입학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이것은 온라인 입학 시스템에 반영되었다. 2025년 현재 교사 자격과 양성 체제의 개편과 교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책연구를 통해 추진 방안이 제안되었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개편안 발표는 미루어지고 있다. 설립 및 운영 기준 개편안 또한 전문가 논의와 정책 연구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은 관련자 간 토론과 개선 협의가 더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영유아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과제와 관련해서는 0-2세 교육과정 개정이 2024년 우선 완료되었고 교사 연수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다. 추후 3-5세 교육과정 개편 또한 연결하여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과제 영역인 관리체계 개선은 관리체계 일원화, 효율적 지원기반 마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3대 개선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고, 지방 차원에서의 재정을 포함한 관리체계 이관과

3) 교육부(2024).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근거 법 개정 등 통합 기반 마련 가속화 작업이 2025년 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시작된 정부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제시하였으므로 같은 기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이관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나. 유보통합 정책 과제 추진

1) 선도교육청 사업 시행

정부는 2023년 3월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선도교육청을 선정하고 유보통합 과제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⁴⁾. 선도교육청 사업의 목적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하여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학부모 부담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격차 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2023년 5월에 선도교육청 9개(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가 선정되었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과제에 총 482억 원이 지원되었다.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유보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교육·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관리체계 일원화와 정부조직법 개정

정부는 2023년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였다⁵⁾. 즉 보건복지부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대상으로 두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 업무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과 관련한 사회복지서비스로 규정되고 있는데 다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근거법 차이로 제외되었다.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이관 방식은 2023년 중앙부터 진행하고 지방은 2단계에 해당하는 2024년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결과적으로 2025년에 통합모델이 완전 적용되는 것이 로드맵이었다. 이관 절차를 보면, 이관되어야 할 업무를 설정하여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개편과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한 이후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이관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중앙 차원에서의 이관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진행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소관 변경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관할도 교육부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지방 수준에서의 이관은 시점 상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지방 차원에서 교육청 사무에 ‘영유아 보육’이 추가되어야 하는 단계의 개정은 계류 중이다⁶⁾.

재정 이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산의 지속 지원과 영유아 이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두고 중앙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4) 교육부 보도자료(2023. 3. 1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

5)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3).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안).

6) 김아름·최윤경·심현기·박유경(2023).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이관하는 것을 1단계로 추진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방 차원에서, 국고 대응투자는 법률 명시를 통해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지자체 자체 사업은 그 성격에 따라 이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1단계는 계획에 따라 2024년 6월에 이관되어 모든 국고 사업과 관련 업무가 교육부 관할로 정착하였으나, 2025년 7월 시점에서 지방 차원 재정 이관인 2단계는 관련 근거 법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은 교육청으로의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의 추진 일정 역시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3) 유보통합 시범사업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구현하여 학부모와 교사가 유보통합을 통한 상향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4년 9월부터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⁷⁾. 이는 또한 기관 간 교육·보육 여건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현실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향상하고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통합기관 운영을 위한 최적의 모델을 모색하는 것에도 사업 목적이 있었다. 시범사업은 잠정적으로 설정된 통합 기관의 명칭을 차용하여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으로 공고되었다. 시범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시·도 교육청으로, 시범사업은 최대 3년간 추진이 계획되었고 1차년도인 202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50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사업에 참여하였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앞 절에서 언급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제시된 바를 더 구체화

하여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범 내용의 영역은 참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시범 운영 사항과 이를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교육청 차원의 시범 사업 등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 시범학교 차원의 주요 사업은 상향평준화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한 운영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전문성 및 역량 강화의 4가지가 세부 과제화 되어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이 직접 수행하는 시범 사업으로는 시범기관 지원 외에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였다. 교육청 시범사업인 특색사업은 지역사회협력구축, 교사 역량 강화, 정서사회심리 발달 지원과 특수교육인프라 확대, 영유아 교육·보육 책무성 강화에서 자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진행한 몇몇 면담 결과를 보면,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 학부모는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여러 과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사업을 추진한 시·도교육청의 관계자들도 여러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이 추구한 질 개선의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다.⁸⁾ 이러한 과제의 지속 이행을 위해 2025년에는 2차년도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정책 계획과 추진의 과정을 통해 지난 3년간 유보통합은 점진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5년에도 관련 법의 개정 및 통합법의 제정, 개정된 0-2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 교사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개발 등 정책 사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교사 양성 및 자격 제도, 운영 개선 모델 측면에서 새

7) 교육부(2024). 유보통합 체감도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실시한다. 보도자료(2024. 8. 20)

8) 김은설 외(2025). 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실행지원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정부의 국정과제와 함께 현실화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주요 이슈 및 제언

수십 년 동안 별개의 영역에 있었던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이슈와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책임형 개혁안 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유보통합 재정의 확보이다. 유보통합은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추진 방향으로 하고 이를 위해 기존 유·보 예산의 지속 지원과 영유아 이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기존 사업의 축소 없이 재정 이관이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다. 질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 제시하고 있는 사업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가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교사 추가 채용 혹은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지급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육 환경의 개선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도 큰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의 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새로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도 정부책임 유보통합의 첫 번째 과제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고 다음이 교육·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이다. 기존 국고예산과 국고와 대응투자 사업뿐 아니라 지자체 자체 사업 또한 축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추가로 인력 지원, 비용 지원을 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이슈이다.

둘째는,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에서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린이집이 교육청 관할 기관 체계 속에 있게 되어야 진정한 유보통합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시범사업 1차년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교육청들의 피드백을 보면 어린이집에 지원하려 해도 교육청 관할이 아닌 지자체 시설에 재정 지원이 불가능했고 행정 전달 체계 또한 별도 시스템이어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었다. 2025년에는 관련 법의 개정과 통합기관 운영 근거 법 제정을 정책 목표로 두었던 만큼 이러한 주요 사안이 누락되지 않고 온전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유·보 현장 통합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자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 자격과 양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2023년 유보통합이 처음 논의되던 시점부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 수행 주체인 유·보 교사가 상호간 법적 신분, 자격취득 과정, 양성의 기간과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율하고 일원화해 가는 과정에는 두 집단 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갈등과 논쟁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2024년에는 교사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고 협의하기 위한 토론회 등 다수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으나 공청회까지 이르는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영유아기 전 연령 담당 교사 자격과 연령에 따른 별도 자격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하나는, 유치원과 차이나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유형과 운영 방식을 어떻게 교육청의 관리

9) 김은설 외(2025). 2024년 유보통합 시범사업 실행지원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체계 내부 기관으로서 안착시킬 수 있는지 모색해야 하는 점이다. 민간 위탁 방식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성격 규정,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원 방안, 별도의 유형을 요구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요구 검토, 교육청 소속으로서의 직장어린이집 정체성 규명 등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지자체 관할 기관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도 확정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 유치원의 돌봄 시간 확대에 인한 관련 인력의 배치 등 또한 현명하게 대응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통합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현실적 이슈들에 대해 섬세하고 현실적인 운영 모델이 공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새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공약을 보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고 학부모 부담 감소를 위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높이며,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등 영유아와 부모, 즉 이용자 입장에서 개선의 체감도를 얻을 수 있는 이슈와 함께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응 등 선택 교육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이 물론 우선되어야 할 유·보 개혁 과제이지만 직접 유보통합의 추진 동력이 될 쟁점들을 해결해 가기에 충분하지는 않아 보인다. 향후 더 구체화된 국정과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유보통합을 위해서 해결하고 가야할 절차적 과제들, 예를 들면 재정의 확보, 법 개정, 교사 자격, 양성 및 처우 개선, 교육청 소속으로서 어린이집 운영 모델의 개선 등이 누락되지 않고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유보통합이 학부모와 영유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등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입장 차와 갈등은 어렵지만 해결될 절차로서 인

식하여 ‘책임있는 정부’가 소통과 협의를 통한 발자국씩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